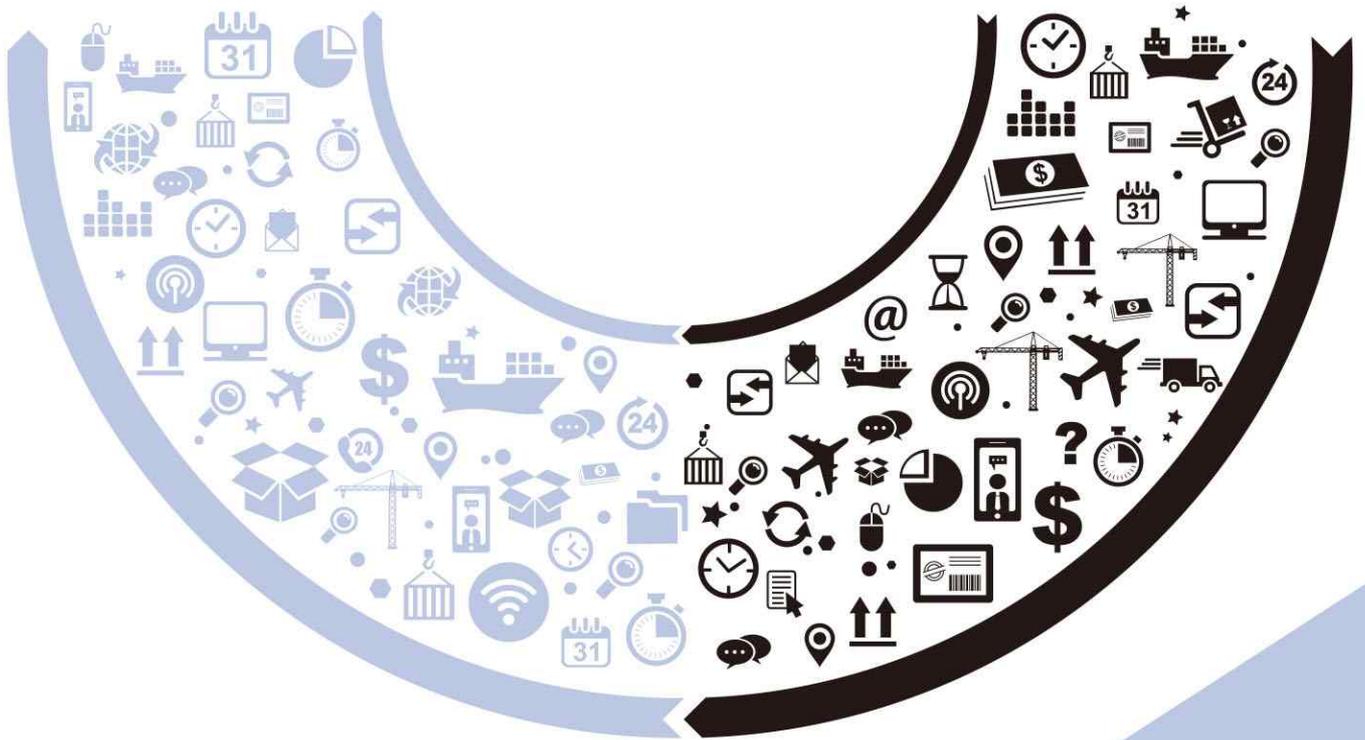


## Global Strategy Report

# 트럼프노믹스

## 주요정책 특징 및 대응방안

Global Strategy Report



# CONTENTS

## 목 차

### 요 약 / 1

---

#### I. 검토배경

---

#### II. 트럼프노믹스 주요정책 분석

---

- 4 | 1. 통상정책
- 10 | 2. 재정정책
- 13 | 3. 에너지정책

#### III. 트럼프노믹스 실현가능성 점검

---

- 15 | 1. 정책 실현 가능성
- 20 | 2. 트럼프 대통령 공약의 경제적 효과

#### IV. 결론

---

- 23 | 1. 시사점
- 25 | 2. 전망 및 대응방안

## 요 약

### □ (목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정책으로 전통제조업 일자리 창출

#### ① (통상) 공정무역, 既무역협정 재검토, 관세부과\* 등을 통해 무역적자 축소

-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검토 및 탈퇴
- ▶관세부과(중국 45%, 멕시코 35%) ▶환율조작국 지정(중국)

#### ② (재정) 대규모 인프라 투자, 감세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 제고

- \* 법인세 인하, 중·상층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재개편과 1조 달러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3~4%로 높이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선정

#### ③ (에너지)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통한 완전한 에너지 독립\*

- \* 화석에너지 개발과 석탄 화력발전 억제 규제 철폐 ▶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재추진
- ▶ 연방정부 환경규제권한 축소, 파리 기후변화 파기

### □ (특징) 협상의 기술을 활용한 “당근과 채찍의 조화”

#### ○ (미국산 제품구입) 정책입안\*(국가무역위원회), 집행(상무부), 협상(무역대표부) 수행 기관에 매과성향 수뇌부 임명, 무역적자국에 미국산 제품구입을 위한 압박구사

- \* 국가무역위원회(NTC)는 백악관에 신설된 조직으로, 트럼프 통상정책의 변화가 미국 내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력을 점검·계획하는 역할

#### ○ (미국인 고용) 미국기업과 해외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가시적인 성과창출\*

- \* 미국기업: 포드(미시간 공장 7억달러 투자), 해외기업: 소프트뱅크(500억 달러 투자), 도요타(5년간 100억 달러 투자), 알리바바(100만명 고용창출), 피아트(미시간, 오하이오 공장 현대화 10억 달러)

### □ (전망) 단기에는 미국경제에 긍정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평가

#### ○ (경제성장) 확장적 재정정책\*은 미국 경제성장률을 단기적으로 상향전망

- \*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재정확대, 리쇼어링 정책, 금융 및 에너지산업 규제철폐는 미국 경기개선의 기대를 상향

#### ○ (세계교역) 트럼프 정책 현실화시,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단기적 세계교역 위축 우려 증가

- \* 보호무역주의 vs. 달러강세, 확대정책 vs. 통화긴축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 방향으로, 트럼프 정책 원안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무역】 불공정무역품목을 지정\*, 반덤핑, 상계관세로 중국압박 가능성 <高>

\* 비관세장벽 등 교역대상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중 우선협상 대상을 지정, 협상 진행, 장벽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인 보복조치 가능(슈퍼 301조, 무역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 발동, 무역법 301조 및 관세법 337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 【환율】 환율조작국 지정보다는 요건을 변경→對中압박 가능성 <高>

\* 올해 발표될 재무부 환율보고서는 3가지 중 1개 조건만 충족예상: ① ‘대미무역흑자 200억 달러’는 충족(2016년 1~11월 중국의 대미무역수지 흑자는 3,200억 달러) ② ‘GDP대비 3%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는 불충족(지난해 3분기 누적 중국 경상수지는 1,730억 달러로 명목GDP 대비 2.4% 수준), ③ ‘GDP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개입’요건 불충족(지난해 중국 외환보유고는 3,198억 달러 감소, GDP대비 3%를 넘는 달러 매도개입 추정)

- 【NAFTA】 NAFTA\* 재검토(또는 탈퇴)로 對멕시코 압박을 통한 미국 일자리 창출 목표 추진, 일방적인 파기보다는 재검토로 귀결 <高>

- 【TPP】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100일 액션 플랜에 따라 폐기 <高>

- 【한미 FTA】 협정 종료(termination)보다는 개정(amendment) 요구 가능성 <低>

□ (방안) 지나친 공포나 낙관적 기대가 아닌 중장기 시각에서 체계적 대응전략 수립

○ (다변화) 수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품목·시장관점에서 수출동력 다변화

- (품목) 화장품, 게임 등 한류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비재와 주력품목인 소재·부품을 첨단·혁신기술 분야로 도약, 품목다변화 추진

- (시장) 내수시장이 큰 신흥국(인도, 아세안), 원자재 수출국(브라질, 러시아)의 수입 수요 확대를 수출증대로 활용, 시장 다양화

○ (패키지형 수출확대) 단순 상품 수출의 전통적 모델에서 탈피하여 상품, 서비스 등이 혼합된 패키지形 고부가가치 수출 모델로 체질 개선

○ (현지화전략 재정립)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생산시장으로서 미국 내 생산에 적합한 산업 및 품목을 면밀히 검토·전략 수립

○ (4차 산업혁명 대응) 자국 산업 보호만이 더 이상의 가치가 아니며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부각될 가능성

# I 검토배경

## □ 트럼프 대통령 집권으로 新보호무역주의와 경제 불확실성 우려가 대두

○ 경기부양을 위해 인프라 투자 등 재정지출 확대를 천명하고 있어, 기존 양적완화 통화정책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정책 대전환 예고

-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확대와 같은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경제성장률 개선이 미미하여 소위 '트럼플레이션\*(Trumpflation)' 이슈가 부각

\* 트럼플레이션은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발표된 후, 트럼프+인플레이션의 합성어가 등장

○ 국제유가 상승 전망, 구리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확대\*

\* 일본: -0.2%(’16년)→0.5%(’17년), 영국: 0.7%→2.5%, 미국: 1.2%→2.3%, 프랑스: 0.3%→1.0%, 독일: 0.4%→1.5%, 한국: 1.0%→1.9%, 싱가포르: -0.3%→1.1%, 베트남: 2.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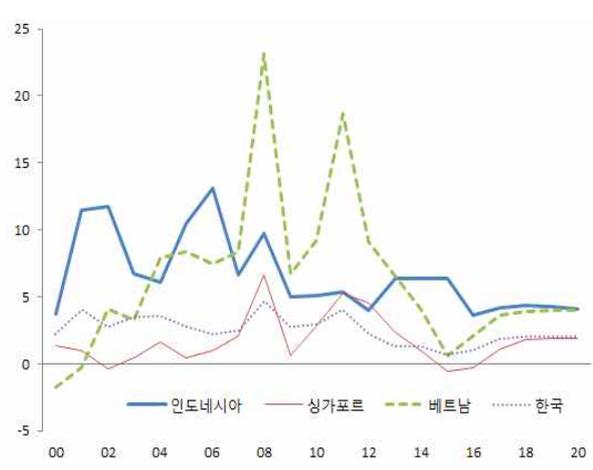
- 반면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브라질과 러시아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

\* 브라질: 9.0%(’16년)→5.4%(’17년), 러시아: 7.2%→5.0%, 중국: 2.1%→2.3%

<그림 1> 주요국의 소비자물가(1)



<그림 2> 주요국의 소비자물가(1)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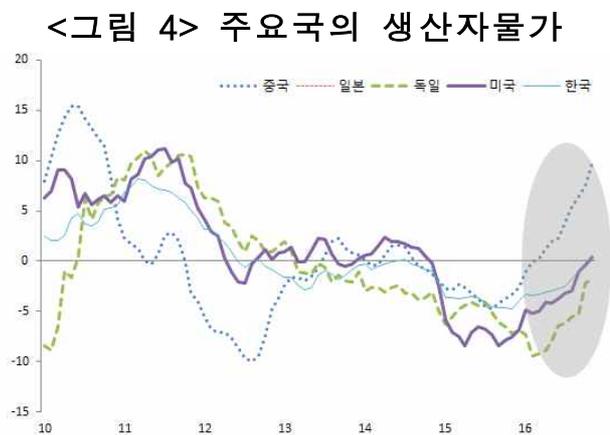
□ 주요국 제조업 경기지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생산자물가 증가율도 확대되는 상황

- 미국 제조업 ISM 지수\*가 지난 9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였으며, 중국 제조업지수도 51.2로 2.3년만에 최고치를 시현

\*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하는 제조업 ISM지수(12월)가 54.2로 '15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중국 제조업 경기회복세에 따른 생산자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트럼프플레이션과 함께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에 긍정적인 작용

\* 중국 생산자물가 상승세는 원자재 가격 반등, 구조조정에 따른 중국 내 공급과잉 현상 일부 완화, 위안화 가치급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압력에 기인



자료: CEIC(2017년 1월)

□ 미국 경제는 트럼프 정부의 공약에 대한 실제 이행여부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

- 재정지출 확대와 세금감면, 보호무역조치, 반이민정책 등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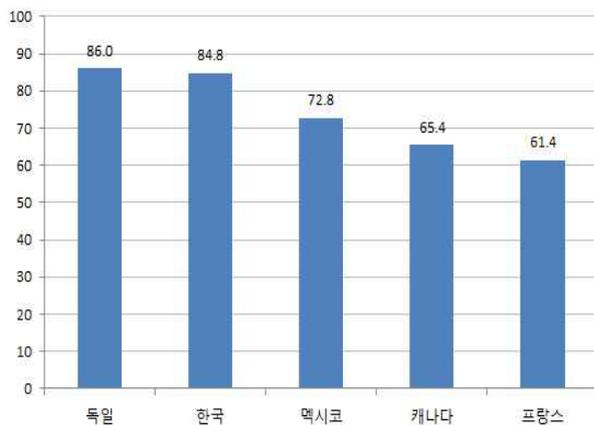
- 최근 글로벌 경제는 리플레이션\*(reflation)으로 완만한 경기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지, 아니면 일시적 경기확장 이후 세계 교역감소와 부채증가로 인해 다시 경기위축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혼재

\* 경기불황기에 경기회복을 위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까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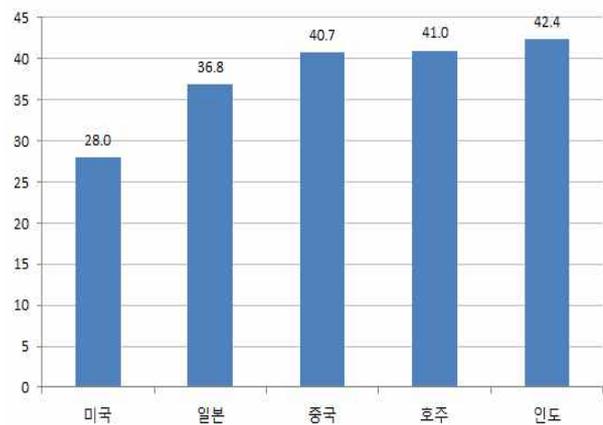
□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정책을 점검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

-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선기간 및 최근 공약을 분석할 필요
-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높은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재정정책, 에너지 정책을 차례로 분석, 실행가능성 및 미치는 영향을 점검
- 우리나라의 무역개방도는 전세계 평균 58.3%(15년 기준)보다 높은 84.8%로 다른 나라에 비해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큰 상황

<그림 5> 주요국의 무역개방도(Ⅰ)



<그림 6> 주요국의 무역개방도(Ⅱ)



주: 2015년 기준

자료: 세계은행(2017년 1월)

## II

# 트럼프노믹스 주요정책 분석

## 1

### 통상정책

#### □ (기본방향)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통한 전통 제조업분야 일자리창출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 ▶한미 FTA 재협상, 관세 부과(중국 45%, 멕시코 35%) ▶**힘을조작국 지정(중국)**, 국경장벽 설치(멕시코) 등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통상정책 추진

○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극단적 보호무역 공약은 자유무역과 불법이민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백인 저소득 계층 지지 획득에 성공\*

\* 클린턴도 대선기간 중 反자유무역 성향의 노동조합과 샌더스를 지지하는 진보층 표심을 얻기 위해 그간의 자유무역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시사

#### ① (무역협정 재검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FTA 등 기존협정 재검토\*

\* 미국은 이스라엘(1985년), 북미자유무역협정(1994년), 칠레(2004년), 한국(2012년) 등 전세계 20여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황

- [TPP]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TPP\*는 중국, 일본과 일부 대기업에게만 이익이 되는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철회를 주장(16.11.21, 인터넷 영상메세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sup>1)</sup>(USITC, '16.5)는 TPP체결시 실질GDP 427억 달러 증가하며, 농업, 서비스업의 수혜, 제조업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발표(2032년까지 농업, 서비스업에 각각 100억 달러, 423억 달러 생산증가, 제조업은 -108억 생산 감소)

<표 1> TPP 체결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

산업	수출		수입		생산		고용 %
	십억달러	%	십억달러	%	십억달러	%	
농업	7.2	2.6	2.7	1.5	10.0	0.5	0.5
<b>제조업</b>	15.2	0.9	39.2	1.1	<b>-10.8</b>	<b>-0.1</b>	<b>-0.2</b>
서비스	4.8	0.6	7.0	1.2	42.3	0.1	0.1

자료: USITC(2016년 5월)

1) USITC(2016)

- [NAFTA] NAFTA 재협상 의지를 강하게 천명해 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더 나은 협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황\*

- \*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를 미국에 좋은 방향으로 재협상(renegotiate)하도록 요구를 할 것이며,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NAFTA를 탈퇴(withdraw)하겠다고 제시
- \* 외교정책 연설('16. 4.27)에서 NAFTA를 포함한 기존에 체결했던 FTA가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파탄내고 있다고 주장

- [한미 FTA]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한미FTA로 미국의 일자리 파괴자(Job Killer)라고 표현하였으나, 재협상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상황

### ② (관세부과) 미국의 對멕시코 및 對中 관세부과로 인한 양국의 반발 가능성 제가\*

- \* 중국의 대미 주요수출품은 전기기기와 부품과 가구, 조명기기, 의류, 신발 등 저가 소비재이며,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려는 철강제품은 중국의 대미수출 전체에서 2.5%에 불과
- \* 반면 미국의 대중수출비중은 8%로 높은 수준이며, 중국의 주요 대미수입품은 전기기기, 항공기 등은 물론 과일류, 곡물, 고기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국도 이러한 제품의 보복관세의 여지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멕시코, 중국에 각각 최대 35%, 45%의 고율관세 부과하여 통상압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 \* 트럼프가 대중무역수지적자 해결을 위해 고율의 관세부과 시, 가격 상승에 따른 미국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결국 애플 등 미국수출기업에게도 피해가 예상

### ③ (환율조작국 지정) 무역수지 적자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특정국가 견제장치 마련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크게 이슈화 하였고, 취임 100일에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방안을 언급, 대중통상 압력 증가 예상

- 미국 재무부<sup>2)</sup>는 대미무역수지 흑자국(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3%초과), 환율시장 개입(GDP대비 순매입비중 2%초과)이라는 3가지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을 지정

- \* 3개요건 충족 시 '환율조작국(country manipulating its currency)', 2개요건 충족 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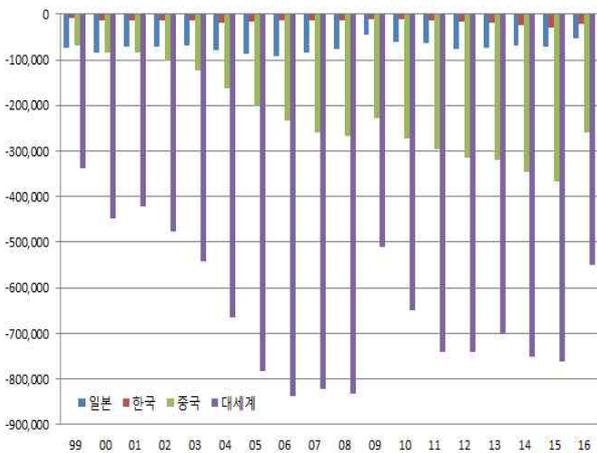
2)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6)

♣ 참고사항 ♣

- ① 2015년 기준 미국의 대세계 상품무역수지적자 규모는 -7,626억 달러이며, 중국 -3,674억 달러(전체 47.1%수준), 독일 -754억 달러(9.9%), 일본 -703억 달러(9.2%), 멕시코 -675억 달러(8.9%), 한국 -280억 달러(3.7%)로 집계
- ② 2016(1~9월) 기준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596억 달러(전체 47.1%), 독일 -501억 달러(9.1%), 일본 -509억 달러(9.4%), 멕시코 -516억 달러(9.4%), 한국 -223억 달러(4.0%)

- 미국 재무부는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의거, 교역상대국이 환율조작에 대한 3가지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분석 3)
  - \* 미국 재무부('16년 10월): 중국, 한국, 독일, 일본,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며, 스위스를 제외한 5개국은 연속해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 베넷해차카퍼(B-HC) 수정법안<sup>4)</sup>에 따라 교역대상국이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교역상대국에게 필요한 조치를 시행

<그림 7>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표 2> 환율조작국 평가결과

국가	대미무역 수지적자	경상수지 흑자	환율개입
중국	3,561억 달러	2.4%	-5.1%
한국	302억 달러	7.9%	-1.8%
독일	711억 달러	9.1%	-
일본	676억 달러	3.7%	0.0%
대만	136억 달러	14.8%	2.5%
스위스	129억 달러	10.0%	9.1%

주: 중국은 '16년 10월에는 관찰대상국 지정대상이 아니나, 지난 4월에 관찰대상국에 지정되어, 최소 2회는 관찰대상국에 잔류한다는 추가규정에 따라 지정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17년 1월), 재무부('16.10월)

- 3) 미국 재무부는 최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2번 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 4) B-H-C수정법안은 미국의 '2015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의 제7장 환율조작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임. 동 법안은 하원(2015년 12월)과 상원(2016년 2월 11일)을 각각 통과, 오바마 대통령 서명(2월 24일)으로 효력이 발생함.

◆ B-H-C법안에 의거한 조치 ◆

- \* 시정요구(분석결과를 의회에 설명하고, 환율조작국과 해결방안을 협상) → 1년에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①해당국에 대한 미국기업의 투자 제한 ②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정부조달 시장진입 금지, 해당국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③IMF, WTO를 통해 해당국 감시기능 강화

□ (정책결정) 의회\*와 행정부\*를 중심으로 이익단체,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민간협회와 언론이 비공식적으로 참여하여 통상정책을 수행

- \* 의회는 헌법에 통상정책에 대한 명백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권한 일부를 행정부에 위임하는 대신 행정부의 통상협상 행위를 견제와 감독을 강화
- \* 행정부에는 대통령직속기구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 및 무역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관이 각기 관련된 업무를 분담

- (의회) 미국 의회는 헌법 제1조 8항으로부터 통상정책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무위원회가 담당
  - 지난 선거 결과,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 의회 다수당과 행정부가 동일한 소속인 일원화된 정부로 구성

<표 3> 미국 상·하원 정당별 의원수 추이

	상원			하원		
	공화	민주	기타	공화	민주	기타
제107차(2001~02)	50	50	0	221	212	2
제108차(2003~04)	51	48	1	229	204	1
제109차(2005~06)	55	44	1	232	202	1
제110차(2007~08)	49	49	2	202	233	0
제111차(2009~10)	41	57	2	178	255	-
제112차(2011~12)	47	51	2	239	190	-
제113차(2013~14)	45	55	-	233	199	-
제114차(2015~16)	54	46	-	247	188	-
제115차(2017~18)	52	48	-	241	194	-

주: 차수별 의회의 다수당은 음영 처리('17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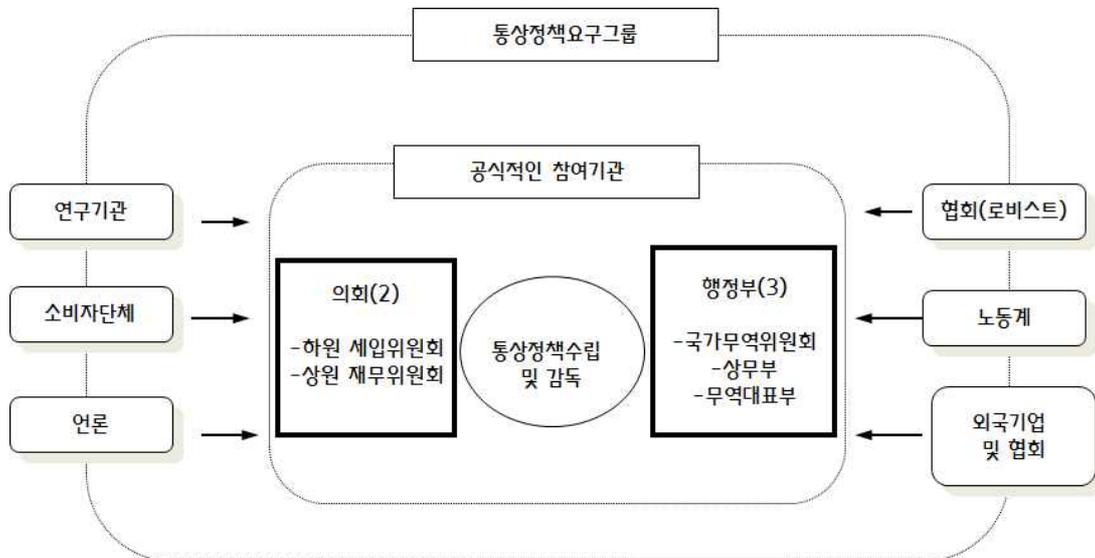
자료: 미국 상원; 하원; 뉴욕타임즈.

○ (행정부) 매파 성향의 인사를 총괄책임자로 임명, 강경한 통상정책 전망

♣ (국가무역위원회 신설의미) 상무부, 무역대표부, 노동부 등을 산하에 두고, 무역과 통상정책을 총괄, 무역-통상을 외교-안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간주

- 미국 통상정책을 총괄, 집행, 협상을 수행하는 주요기관에 강경 매파 성향의 수뇌부를 임명, 강경한 통상정책 전환을 예고
- 정책총괄에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 정책집행에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지명자, 정책협상에 로버트 라이사이저(Robert E. Lightizer)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구성

<그림 8> 미국 통상정책 결정 당사자



주: 고희채<sup>5)</sup>(2014), p27을 참고로 재작성 하였으며 국가무역위원회는 신설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통상전쟁에 대비해 백악관에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 NTC)를 신설하고, 대중강경론자인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교수를 위원장에 임명하였으며,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대중강경파로 평가

\*\* 상무부는 미국의 산업을 총괄 관리하며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고 자국 산업보호에 중점을 둠. 상무부내 국제무역청은 공정무역을 관장하고 국제통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 주요 임무는 덤핑여부를 판정

5) 고희채 외(2014)

\*\*\* **무역대표부**는 각 부처간의 입장을 정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종 통상협상에 참여함. 무역대표부는 1962년 무역확대법을 근거로, 1963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설립된 후, 1974년 통상법에 의거 대통령 직속의 각료급 기관으로 격상됨. 주요 기능으로 미국의 국제무역, 직접투자 정책입안 및 조정을 하며,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301조 관련 제소, 337조 및 201조의 수입규제관련 사안도 담당

## □ (기본방향) 대규모 인프라 투자 감세\*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 일자리 창출

- \* 스티븐 므누신(Steven Terner Mnuchin) 재무부장은 법인세 인하,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상층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재개편과 1조 달러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3~4%로 높이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선정(주택모기지 이자, 자선기부금 등 세액공제 한도 축소 또는 폐지로 부유층 공제혜택 축소를 주장)

▶ 10년간 1조달러 인프라투자(2,500만개 일자리 창출) ▶ 감세를 통한 소비·투자진작

## ① (인프라 투자) 10년간 1조 달러를 교통, 항만, 수로 등 인프라 투자 → 경기부양

- OECD<sup>6)</sup>(2016.11)는 트럼프의 인프라 정책 시행사\*, 미국의 '17년 GDP는 0.25~0.5% 상승, '18년에는 감세효과가 추가되어 1%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트럼프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는 이유 ♣

- \* **(공약)**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시행을 천명
  - ☞ 미국 주요 인프라 시설 노후연수는 도로 및 고속도로 28.4년, 상수도 25.6년, 하수도 26.5년 수준 (미국 경제분석국, 2015년 기준)
- \* **(방식)** 민관 공동파트너십<sup>7)</sup>(Public-Private Partnerships)을 통한 인프라 투자
  - ① 민간자본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건설이후 발생하는 운행수입을 민간이 소유
  - ② 민간이 투자한 자금을 세액공제<sup>8)</sup>(자본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82%)
- \* **(비판)** 정부 재정적자 증대 우려
  - ☞ 수익성 없는 공공-민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지원의 가능성,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의무적 지출(mandatory spending)비중 확대
- \* **(전망)** 인프라 투자는 승수효과로 경기부양 효과가 제기되나, 재정적자 확대 및 경기부양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를 유발, 금리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6) OECD(2016)

7) Wilbur Ross and Peter Navaro(2016). PPP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약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유형을 광범위하게 설명하는데 사용됨. PPP는 정부가 민간부문의 자원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공공인프라 및 서비스를 조달하고 구현하는 메커니즘으로, 정부예산의 문제로 인프라 부족을 직면할 경우 민

- \* 인프라 투자 등 재정지출 승수가 0.5~2.5로 추정되므로, '17년 GDP가 0.25~0.5% 상승하기 위해서는 GDP의 0.17~0.35%(316억 달러~65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며, 트럼프가 제시한 1조 달러(10년간) 인프라 투자가 시행되면 상당한 수준의 경제효과 발생
- \* 의회예산국<sup>9)</sup>(CBO, 2015) 추정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 연방정부 재정지출(0.5~2.5) 저소득층·중산층 세금감면(0.3~1.5), 고소득층 세금감면(0.1~0.6)
- 아울러 민간 중심의 성공적인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민간 기업들의 해외 현금의 자국 내 송환이 필요하다고 주장
  - \*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가져올 경우 부과하는 세율을 기존 35%→10%로 인하하겠다고 언급
- 트럼프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18년 회계연도('17년 10월~'18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상이며, 재정정책 효과는 '17년 하반기 이후 발생 전망
  - \* 미국 2017년 회계연도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로 이미 시작된 상황
- 반면, 1조 달러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확대 재정정책은 단기적인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
  - \*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의 부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민간협력투자(PPP)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어서, 재정적자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언급
-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09년 GDP대비 -9.6%까지 증가 이후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와 트럼프의 확장적 재정정책시 다시 증가 가능성
  - \*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은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이 8,713달러로 가장 높으며, OECD 평균 3,453달러에 비해 25배 높은 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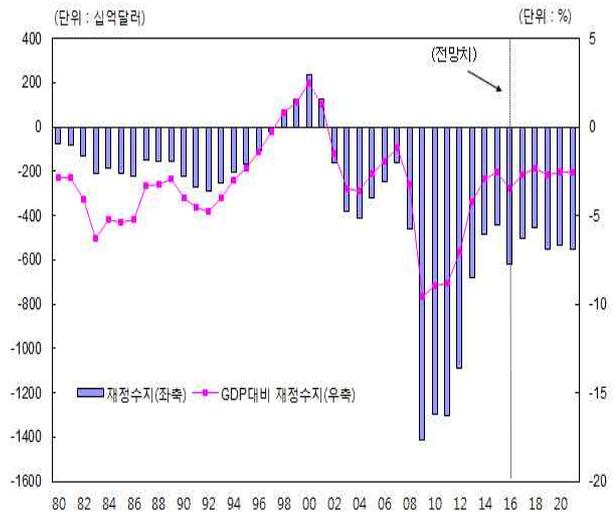
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결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 8) <예시> 민간사업자가 1의 자본금을 투자하면, 이를 담보로 5만큼 차입한다고 가정함. 이 경우 민간 사업자는 전체사업비용의 1/6(16.7%) 부분만 자본금을 투자하면 됨. 이후 자본금에 세액공제율 82%를 적용하면, 민간사업자의 투자비용은 13.6%(=16.7%\*82%) 감소함.
- 9) Whalen J.Charles and Felix Reiching(2015)

<그림 9> 1인당 국민의료비지출



<그림 10> 재정수지 적자 추이



자료: OECD(2015), “Health at glance”,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처(OMB)

② (감세) 개인 및 법인세 간소화 및 전 소득군의 세율 인하를 통한 소비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

- (소득세) 현 7개 소득 수준별 세율 구간을 4개구간으로 간소화, 상속세 폐지

<표 4> 소득세 공약

소득구간		소득세율	장기투자이익세율
부부공동	독신		
0~75,000달러	0~37,500달러	12%	0%
75,001~225,000달러	37,501~112,500달러	25%	15%
225,001달러 이상	112,501달러 이상	33%	20%

자료: www.donaldjtrump.com

- (법인세) 법인세율(최고 39.5%)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5%로 인하하고, 미국 기업들의 해외 소득에 대한 조세유예를 즉시 폐지

### 3 에너지정책

#### □ (기본방향) 셰일 에너지 등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통한 완전한 에너지 독립

▶ 화석에너지 개발과 석탄 화력발전 억제 규제 철폐 ▶ 키스톤 파이프라인을 지지하는 반면 고급 에너지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주장 ▶ 연방정부의 환경규제권한 축소, 파리 기후변화 파기

- “An America First Energy Plan”을 통해 OPEC이나 미국 국익에 적대적인 국가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할 필요가 없도록 에너지 자립을 이루겠다는 목표 제시
  - 에너지를 생산해 얻은 수입으로 도로 및 학교를 건설할 수 있고 저렴한 에너지 비용은 소비자들에게도 기여
  -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성이 부족한 친환경 에너지원에 부정적이며, 환경규제 강화는 기업 수익성 약화로 이어진다고 비판
- 오바마 정부가 제시하였던 “2025년까지 2011년 대비 신차연비 50% 개선 가이드라인” 노력 약화 가능성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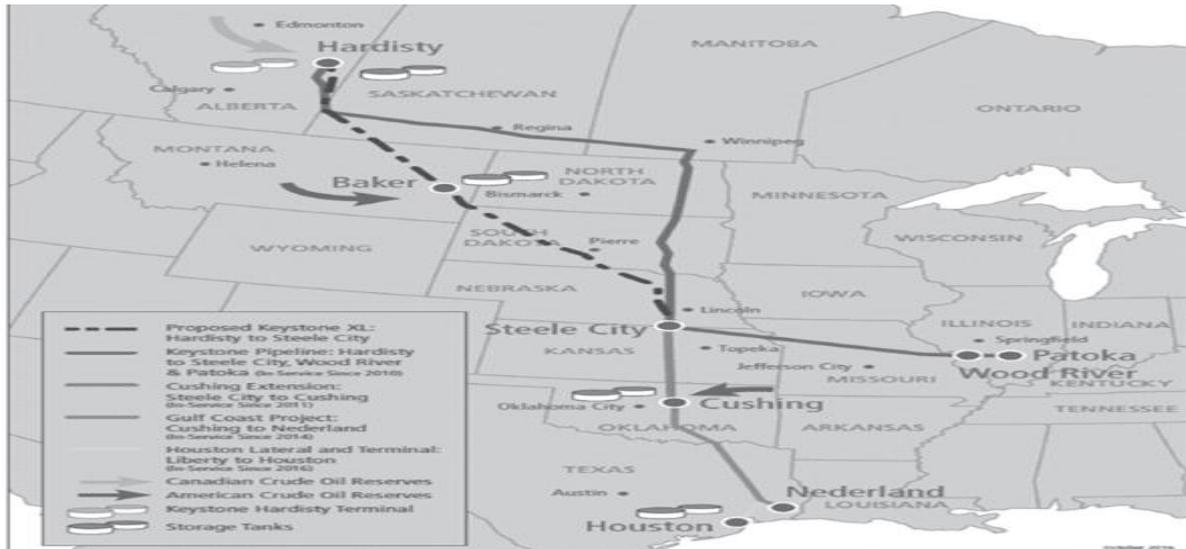
#### ① (화석에너지 확대) 화석연료 개발 및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독립

- (자국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기간 중 미국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미국 내 석유, 가스, 석탄 등을 개발 수출확대로 자국내 일자리 창출을 역설
- (키스톤 XL 파이프라인<sup>10)</sup>) 동 프로젝트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주장,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천명
  -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에너지 프로젝트의 인·허가를 지연시킨다고 비판

10)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총길이는 1,897km, 송유관의 지름은 36인치로 계획되었으며, 7년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환경오염 문제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2015년 11월 16일)하면서 착공되지 못함.

인프라 건설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공언

<그림 11>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경로



자료: 김윤경 · 유학식(2016), p51을 재인용

## ② (에너지 환경규제 철폐11) 전통 에너지산업에 대한 법안 및 규제 철폐

- (청정전력계획 폐지) 오바마 행정부가 환경보호청 법규명령으로 발표(15년 8월) 한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CPP) 완전 폐지\*
  - \* 청정전력계획은 석탄의존도가 높은 27개주가 반대소송을 제기하여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
  -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2% 감축으로 설정하고, 기존 화력발전소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발전부문의 핵심감축으로 제시
- (기후변화 대응 반대) 기후변화 자체를 부인하며,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온난화가 초래된다는 자체를 부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부정
  -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정책에 부정적이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나 녹색기후기금(GCF)에 제공하는 자원공여도 중단

11) 김윤경 · 유학식(2016), pp. 51~52를 인용, 재작성

Ⅲ

트럼프노믹스 실현가능성 점검

1

정책 실현가능성

① (통상정책) 트럼프 정책 현실화시,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세계교역 위축 우려 증가

♣ 트럼프 대통령 '무역 200일 액션플랜' ♣

- ① 2017년 1월 20일 취임이후: ▶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재협상, 탈퇴 등 포함) 선언  
▶무역상대국에 대한 불공정 관행조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폐기
- ② 취임 100일째(4월말): ▶환율조작국 지정검토(중국) 및 미중관계 점검
- ③ 취임 200일(8월 중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

□ 【對中】 최대 45%관세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 핑퐁외교의 종식

○ [관세부과 대중압박 협상 가능성으로 가장 높은 수단

- (Step 1) 불공정무역품목을 지정\*, 반덤핑, 상계관세로 중국압박 가능성 <高>

\* 비관세장벽 등 교역대상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중 우선협상 대상을 지정, 협상 진행, 장벽이 해소 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인 보복조치 가능(슈퍼 301조, 무역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 발동, 무역법 301조 및 관세법 337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 (Step 2) 최대 45%관세부과 등 대중강경정책 추진\* 가능성 <低>

\* (과급효과) 단기적으로 관세부과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미국 소비자 구매력 약화→미국 소비자후생 감소와 기업 이익 감소로 귀결

\* (美 '19년까지 미국 GDP 4.6% 감소, 일자리 700만개 감소로 고율관세는 미국경제에 부정적(무디스)

\* (中) 3년 안에 중국 GDP 4.8%감소, 중국의 대미수출물량 87% 감소 전망

○ [환율조작국 지정] 美 재무부의 2회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잠재적 갈등소지

- (Step 1)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변경→대중압박 가능성 <高>

\* 미국이 현 기준으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어려워 지정요건을 변경할 경우만 해당

<표 3> GDP대비 경상수지적자(%)

국가	중국	대만	독일	일본	한국	스위스
2016년	2.4	15.0	8.6	3.7	7.2	-4.9
2017년	1.6	14.4	8.1	3.4	5.9	-2.4

주: 음영표시는 미국 재무부 환율조작국지정 GDP대비 3%초과한 경우  
 자료: IMF(2016.10)

- (Step 2) 환율조작국 상반기 지정<低> Vs. 하반기 이후로 연기<中>

- \* (파급예상 시나리오)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위안화 변동성 확대→위안화 약세→자금유출 확대→중국 금융위기 발생(대중 무역제재시, 중간재수출비중이 높은 한국과 일본경제에도 부정적)
- \* (예상) 중국대응: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미국제품의 중국시장 판매금지, 미국국채 매도, 자국진출 애플, 퀄컴 등 미국기업 대상 독과점여부 조사(미국기업 중국시장의존율: 애플 23%, 퀄컴 57%, 마이크로소프트 43%) 로 대응 가능

□ 【對멕시코】 NAFTA\* 재협상(또는 탈퇴)과 35% 관세 부과가 주요 골자

\* NAFTA는 1994년 1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역내교역품목의 99.9%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

○ [NAFTA] 對멕시코 압박을 통한 미국 일자리(자동차산업) 창출 수단

- (Step 1) 미국 경제에서 멕시코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파기 보다는 재협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高>

\* 멕시코 와 캐나다는 재협상에 응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NAFTA 조항개정시 2006조에 따라 기존협정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6개월간 고사하면 되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

- (Step 2) 협정 전면 파기 <低>

\* 트럼프는 NAFTA 효과가 멕시코에만 집중되어 있고, 저렴한 인건비로 멕시코로 이전한 미국 제조업체로 인해, 자국일자리 상실 주장

\* 원안대로 실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와 NAFTA 역내 무역으로 성장해온 멕시코의 대미수출감소 및 이전수지 악화 등 멕시코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

\* 멕시코는 미국 전체수출의 11.8%, 수입의 10.5%(2016년 1~10월)이며,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부품을 약 40%정도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등 가치사슬이 매우 복잡하여, 미국경제에도 부담

□ **【기타 무역협정】** 원안 추진시, 보호무역 확산에 따라 세계교역 위축 우려

○ **【TPP】** 협정 폐기 <高>

\* 트럼프 대통령은 TPP 폐기,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취임 100일 이내 과제로, NAFTA 탈퇴는 200일 이내 과제로 선정(Politicoo입수 인수위문건)되었으며, 취임이후 행정명령으로 TPP 탈퇴를 서명(1.23)

○ **【한미 FTA】** 협정 종료(termination)보다는 개정\*(amendment) 요구 가능성 <低>

\* 협정종료는 한쪽 당사국이 협정종료 희망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 협정 개정은 양 당사국이 서면합의하고, 각자의 법적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여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합의하는 날에 발효

② **【재정정책】** 인프라 투자 및 감세는 단기적인 경제성장에는 긍정적이나 실현가능성 문제가 주요 관점으로 부각

♣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및 감세정책** ♣

- ① 경제성장 동력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추진
- ② 취임 100일 과제에 민관협력과 감세 재원을 통해 인프라 재건정책을 추진
- ③ 소득세, 법인세 인하 및 상속세 폐지 등 감세정책

□ **【인프라 투자】** 투자규모에 대한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재

- **(과도한 기대)** 감세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 의회와 정책시행 과정에서 미찰이 발생할 소지도 있어 **트럼프 행정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
- **(민간참여)** 미국은 그동안 정부차원(주/지방정부)에서 인프라 투자를 주도해 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투자의 비효율성을 지적, 민간 참여의 중요성을 역설**
-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민간에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재정중립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주장

- (실행가능성 불투명) 기대수익이 높지 않은 인프라 투자는 민감 사업자의 참여도가 낮아, 결국 정부의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
- 미 의회예산국<sup>12)</sup>(CBO)은 민관공동 인프라투자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운행수입보장도 민간사업자의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해, 인프라투자 사업의 대다수가 연방·주 정부의 채권발행의 지원에 의존\*
- \* 의회예산국은 민관공동 인프라 투자 사업은 정부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인프라방식과 근본적 차이가 없음을 지적
- \* 수익성 없는 민관공동 인프라 투자에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의무적 지출(mandatory spending) 비중 확대에 의한 정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증가

**♣ 트럼프 행정부 인프라 관할 부처 및 장관 ♣**

- ☞ (상무부) 상무부 산하 정보통신 당국은 국가 경기 회복법안의 광대역 기술 기회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서, 상무부 장관은 트럼프 캠프 당시 경제자문을 담당 취임 100일 구상 등 경제정책 분야의 청사진을 제시한 윌버 로스(Wilbur Ross)가 내정
- ☞ (교통부) 교통부는 연방공항, 고속도로, 철도, 대중교통 및 해상 교통 등에 대한 인프라 계획 및 개발을 담당함. 교통부 장관에는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의 아내이자 부시 정부시절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일레인 차오(Elaine Chao)가 내정
- ☞ (국방부) 국방부 산하 토목사업본부는 홍수 위험관리, 인프라개발 등 수자원 활동을 담당함. 국방부 장관은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가 임명됨.

**③ (에너지정책) 원유 생산확대, 규제완화, 기후변화 감축정책 후퇴예상**

**♣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정책 ♣**

- ① 에너지 독립 및 안보를 위한 전통에너지인 석유생산 확대 및 규제 철폐
- ② 키스톤 XL 파이프라인(Keystone XL Pipeline) 프로젝트 재추진 등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 ③ 파리협정 거부 등 기후변화협약에 부정적

12) Joseph Kile(2014)

□ [원유 생산 확대] 미국 내 원유·가스 증산 및 자원 수출확대 정책 추진과 규제 완화 및 철폐 전망

- (전통에너지 생산증가) 미국의 석유·가스 인프라 투자 증대와 인허가 신속화로 미국 내 원유 및 가스 생산량 증가
  - 미국 내 원유와 셰일가스에 대한 생산증가는 초과공급을 의미하며, 수출 장려 시 국제석유시장에 공급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압력
- (규제철폐) 석유, 가스 등 전통에너지 산업 규제 완화 및 철폐는 물론 석유, 가스 메탄누출 규제 등 안정성 또는 환경성 강화 규제정책 완화
  - 오바마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청정에너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로 정한 법안인 “Climate Action Plan(2013)”과 환경규제를 적용받는 습지의 범위를 확장시킨 법안 등을 폐지

□ [파리협정 철회] 파리협정의 구속력을 부인 또는 탈퇴 신청으로 미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리더쉽 상실과 신기후변화체제 약화 전망

- (협정효력부인) 트럼프 대통령은 집행명령을 통해서 비준서의 효력을 제거하여 파리협정의 구속력을 부인할 가능성
- (협정탈퇴) 파리협정을 인정한 상태에서 정식 탈퇴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로, 최소 4년 시일이 소요
  - \* 파리협정의 탈퇴에 대한 조항은 파리협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협정의 발효 후 3년 이후부터 탈퇴신청이 가능하며, 탈퇴 신청후 최소 1년이 경과된 다음에 최종으로 탈퇴 가능 (김윤경·유학식, 2016)

## 2

## 트럼프 대통령 공약의 경제적 효과

### ♣ 무디스('16.6)<sup>13</sup> 3가지 시나리오 ♣

- ① **(시나리오 1)**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홈페이지를 비롯한 그의 연설 및 인터뷰들에서의 경제 정책 공약들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
- ② **(시나리오 2)**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정책 제안들이 모두 채택되나 **당초 제안보다 약하게 반영되는 경우**
- ③ **(시나리오 3)** 트럼프 당선인이 정치적 현실에 대응하여 그의 경제 정책 제안에 대해 **의회와 협상을 통해 당초 제안을 조정하는 경우**

### ① (시나리오 1) 단기에는 긍정적이나 중장기는 부정적인 효과가 가장 크게 발생

- (경제성장률) 취임 당해연도(2017년)를 제외한 2018~2020년까지 경제대공황에 비해 경기침체가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

\* 2017년은 3.7%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0.6%, -1.5%, -0.0%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7~2026년 평균 1.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년 1.6%에서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3.9%, 5.4%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현행수준을 유지시, 소비자물가는 2017~2026년 평균 2.4%수준에서 큰 폭의 변화가 없는 수준

- (실업률) '17년에는 고용증가세로 실업률이 3.5%수준까지 하락하지만,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21년에는 7.3%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현행수준을 유지할 경우 2017년 4.7%수준에서 2026년 4.9%로 향후 10년동안 큰 폭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 (재정적자) 금융위기이후 축소되었던 재정적자가 '17년 GDP대비 -3.8%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6년에는 -11.4%수준까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추정\*

\* 현행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2026년 GDP대비 -4.6%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예상

13) Mark Zandi et al.(2016)이 작성한 무디스 보고서

## ② (시나리오 2) 당초 제안보다 약한 정책을 반영하지만 경제상황은 위험하여 2018년에 경기침체가 예상된다고 추정

☞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정책이 약화(향후 10년간 35조 달러 재정예산 긴축, 이민자 추방제안의 2/3, 중국과 멕시코에 관세부과를 하지만 해당국에서 무역보복이 없는 경우를 상정

- (경제성장률) 2018~2019년 2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며, 2019년에도 1.3%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다만 <시나리오 1>보다는 경기침체가 보다 빠르게 벗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2017~2026년 평균 1.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인플레이션) <시나리오 1>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어 2018년에는 5.1%수준까지 상승 예측

- (실업률) <시나리오 1>보다 실업률이 더욱 큰 폭으로 상승, 2021년에는 9.3%까지 상승할 것으로, 고용시장 측면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예상

- (재정적자) 현행 유지하는 것보다는 재정적자가 확대되지만,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3>의 중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

\* 재정적자가 2016년 GDP대비 -3.5%에서 2021년 7.9%수준까지 상승한 이후 2023년부터는 재정적자 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③ (시나리오 3) 미국 경제는 경기침체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취임초기 경제성장률은 약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를 통해 세금 감면조치 주장(예: 법인세 35%→30%)을 축소하는 등 현 정부 추진상황과 비슷한 정책제안을 구성하는 경우를 상정

- (경제성장률) 2017년 경제성장률은 현행유지(3.0%)보다 낮은 2.8%를 기록할 전망되며, 2017~2026년 평균 1.7%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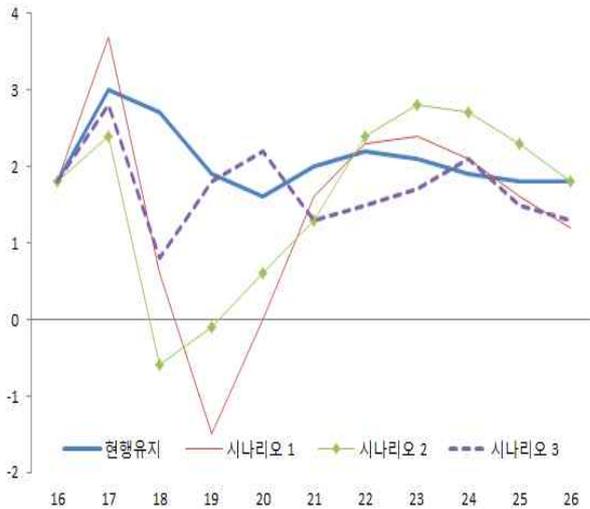
- (인플레이션) 3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3.6%, 4.3%의 상승률을 기록 예측

- (실업률) 현행 유지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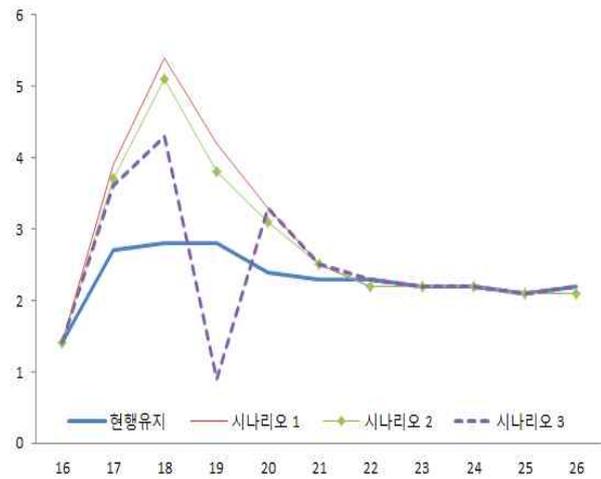
되어, 3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고용시장에 가장 충격이 완만한 경우로 판단

- (재정수지 적자) 재정수지 적자폭이 가장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재정적자 문제가 3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무난한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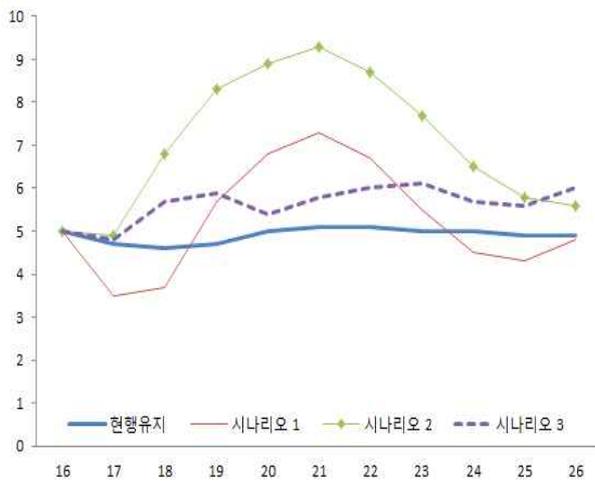
<그림 12>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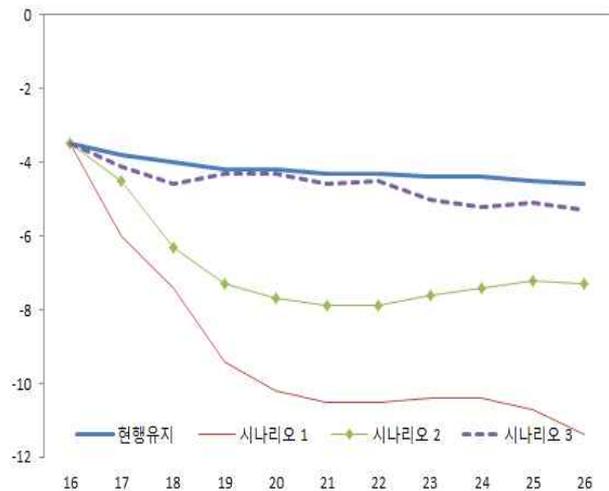
<그림 13> 인플레이션



<그림 14> 실업률



<그림 15> 재정수지 적자



자료: Mark Zandi et al.(2016)

**IV**

**결론**

**1**

**시사점**

□ (목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정책으로 전통제조업 일자리 창출

① (통상) 공정무역, 既무역협정 재검토, 관세부과\* 등을 통해 무역적자 축소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 ▶관세부과(중국 45%, 멕시코 35%) ▶환율조작국 지정(중국)

② (재정) 대규모 인프라 투자, 감세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 제고

\*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장관은 법인세 인하, 중·상층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재개편과 1조 달러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3~4%로 높이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선정

③ (에너지)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통한 완전한 에너지 독립\*

\* 화석에너지 개발과 석탄 화력발전 억제 규제 철폐 ▶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재추진 ▶ 연방정부 환경규제권한 축소, 파리 기후변화 파기

□ (특징) 미국 우선주의 실현을 위한 협상의 기술을 활용한 “당근과 채찍의 조화”

○ (미국산 제품구입) 정책 총괄\*(국가무역위원회), 집행(상무부), 협상(무역대표부) 수행 기관에 매과성향 수뇌부 임명, 무역적자국에 미국산 제품구입을 위한 압박구사

\*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 NTC)는 백악관에 신설된 조직으로, 트럼프 통상정책의 변화가 미국 내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력을 점검·계획하는 역할

- 미국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대미무역 흑자국(중국, 멕시코 등)의 불공정 교역 행위를 비난하며,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을 병행

○ (미국인 고용) 미국기업과 해외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정책\*

\* 트럼프 대통령 유치실적 소프트뱅크(500억 달러 투자, 5만개 일자리 창출), 포드(미시간 공장 7억 달러 투자), 도요타(5년간 100억 달러 투자), 알리바바(100만명 고용창출), 피아트(미시간, 오하이오 공장 현대화 10억 달러)

♣ 트럼프(T.R.U.M.P.) 리더십 특징<sup>14)</sup> ♣

- ▶ 직접적 소통(Tweet): 트위터를 통한 직접적인 소통을 중시
- ▶ 현실적(Realistic): 현실여건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성향(유화적 당선문 발표, 적대적 인사에 대한 포용 등)
- ▶ 불확실성(Uncertainty): 기존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성향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 경영마인드(Management-oriented): CEO 출신으로 목적달성을 위해 협상을 하거나 과감한 행보를 보임(예: 캐리어사의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멕시코 이전계획을 철회시킴)
- ▶ 애국심(Patriotism): 강한 미국(Make America Great Again)을 강조

□ (영향) 단기 미국 경제에는 긍정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

- (경제성장) 확장적 재정정책\*은 미국 경제성장률을 단기적으로 상향전망
  - \* 1조 달러 인프라투자를 포함한 재정확대, 리쇼어링정책, 금융 및 에너지산업 규제 철폐는 미국 경기개선의 기대를 상향
- (세계교역) 트럼프 정책 현실화시,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세계교역 위축 우려 증가
  - \* 신고립주의 명목 하에 부각되는 G2(美, 中)간의 통상마찰은 자유무역을 지향하던 미국의 정책변화를 넘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가능성
  - \* 보호무역주의와 달러강세, 확대정책과 통화긴축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방향으로, 트럼프의 정책이 전면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14) 정준우 등(2017)을 인용

## 2    **전망 및 대응방안**

### 가. 전망

- (경제) 단기 미국 경제에는 긍정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 인프라 투자, 감세 등 확장적 재정정책은 미국 경제성장률을 단기적으로 상향시킬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인프라 투자확대로 경제성장이 가시화될 경우 독일 등 유럽 정치권에도 긍정적 파급효과 발생
    - 금융위기이후 각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여력과 성장 동력이 약화되면서, OECD 등 국제기구는 정부지출 확대 필요성을 주장
  
- (환율) 확장적 재정정책, 환율조작국 지정언급 등으로 달러강세 전망
  - (재정정책) 트럼프의 확장적 재정정책은(인프라 투자확대, 세금감면)과 보호주의 강화는 미국 재정적자 확대와 경상수지 적자 축소로 귀결될 가능성
    - 미국의 상대적인 경제 기초여건 부각과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져 달러화 강세요인으로 작용
  - (통화정책) 올해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 2~3회 인상을 예고,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부각
    -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이자율, 자산 가격, 예상 및 환율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변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4대 안전자산(금, 달러, 엔화, 美 국채)중 기준금리 인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달러화” 자산

-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는 다른 통화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달러화로 표시되는 원유 등 원자재 가격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

**♣ 기준금리 인상 사례 ♣**

**\* 과거 '90년 이후 美 연준은 3차례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경험**

- ☞ (美 금리인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초경제여건이 악한 신흥국 등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
- ☞ '90년대 초 주택대부조합 사태에 따른 경기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시행하였던 미국 연준이 '94년 2월 전격적으로 단행한 금리인상은 멕시코 등 신흥국 위기의 도화선
- ☞ 반면 '99년과 '04년은 시장에 충분한 가이던스를 주고, 각각 6회, 17회에 걸쳐 1.50%p, 4.25%p를 인상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90년대 이후)**

시기	인상시작(날짜)	인상종료(날짜)	금리인상폭(횟수)
1994년	3.00%('94.2)	6.00%('95.2)	3.00%p(총 7회)
1999년	5.00%('99.6)	6.50%('00.5)	1.50%p(총 6회)
2004년	1.00%('04.6)	5.25%('06.6)	4.25%p(총 17회)

자료: FRB(2016)

- (환율조작국 지정) **트럼프의 환율조작국 지정언급은 대중압박을 통한 무역수지 축소를 위한 목적**이므로 **달러강세 요인**으로 예상
  -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대로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조장하여 무역수지 흑자를 키우려고 한다는 견해는 상충되며, 최근의 달러와 강세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경기회복에 기인된 측면
  - 미국 금리 인상을 반영해 美 장기국채 수익률이 상승, 美-日, 美-獨 간의 금리차 확대→**달러화 강세**→**위안화 약세**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
  -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현재 기준으로는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대중압박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 가능\*

\* 올해 4월에 발표될 재무부 환율보고서는 2016년 중국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므로, 3가지 기

준 중 1개 조건만 충족 ① ‘대미무역흑자 200억 달러’는 충족(2016년 1~11월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3,200억 달러) ② ‘GDP대비 3%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는 불충족(지난해 3분기 중국의 경상수지는 1,730억 달러로 명목GDP 대비 24% 수준), ③ ‘GDP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개입’요건 불충족(지난해 중국 외환보유고는 3,198억 달러 감소하였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GDP대비 3%를 넘는 달러 매도개입을 한 것으로 추정)

□ (유가) 미국 내 원유생산으로 인한 공급증가와 중동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인한 유가의 하락과 상승요인이 혼재하나 소폭 상승추세로 전환 가능성

○ (유가하락 요인) 트럼프 에너지정책은 원유생산증가→공급과잉 심화 예상

- 미국 에너지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증가, 원유생산 증대를 통해 국제석유시장의 공급과잉을 초래할 가능성

- 미국의 원유수입정책 방향은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과 함께 캐나다로부터 수입을 증가, OPEC의 수입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전망

\*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생산된 샌드오일을 미국 걸프만에 위치한 정유 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캐나다의 TransCanada사가 2008년부터 추진 중인 건설 프로젝트

\* 오바마 대통령은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승인을 거부(2015년 11월)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후 이를 추진할 계획임을 언급

○ (유가상승 요인)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등 중동지역에 대한 강경정책은 지정학적 긴장고조로 이어져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

-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제재를 원상 복귀시키거나, 신고립주의 정책이 지정학적 긴장고조로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 상승요인

나. 대응방안

□ (시장 다변화) 내수시장이 큰 신흥국(인도, 아세안), 원자재 수출국(브라질, 러시아)의 수입수요 확대를 수출증대로 활용\*

\* 자본재 수입수요 지속(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도시화), 인프라 투자 확대(인도)

-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무역흑자국에 대해 공정무역을 강조함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대미수출 접근방식을 채택하되, 새로운 기회시장을 수출시장으로 다변화 하는 노력 지속

□ (품목 다양화) 자국산업 보호만이 더 이상의 가치가 아니며, 4차 산업 혁명으로 대 변되는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부각될 가능성\*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제품을 발굴하고, 화장품, 게임 등 한류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비재와 문화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특화

- 전통제조업의 서비스 융합 지속 추진(제품과 서비스의 결합, 제품과 소프트웨어의 결합)

- 과거 제조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서 주된 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였지만, 점차 서비스기능(연구개발, 디자인, 마케팅, 애프터서비스) 을 통해 많은 가치 창출로 이동

- 제조 기업들이 제품 제공보다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

-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제조업 가치사슬에 서비스의 역할이 새로 편입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의 제조업에 ICT 기반 서비스를 결합하는 비즈니스를 추진\*

\* 애플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비자와 콘텐츠 제공자를 그 플랫폼으로 연결시키는 새로운 소비생태계를 구축함. 애플이 스마트폰(제품)과 앱스토어(서비스)가 결합하여 고객에게 고부가가치를 제공 하여 2015년 기준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함.

- 고객다변화, 글로벌 시장경쟁 심화 등으로 하드웨어 기능 중심의 경쟁력으로는 글로벌 시장 내 경쟁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디자인, 모바일 UI(User interface)/UX(User Experience) 등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차별화 전략이 고객유인의 핵심 이 될 것으로 전망

- 특히 향후 제조업에서는 사물인터넷 기술 및 빅데이터의 활용을 바탕으로

생산방식,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방식 등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되어, 비즈니스 모델 전주기 상에서 빠르고 지속적인 혁신이 발생**

- 즉,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으로 대표되어 온 제조업의 혁신활동에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새로운 핵심역량으로 부상

□ (4차 산업혁명 적극 대응) 플랫폼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에 적극 대응

- 3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를 경험하였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실제 세상과 연결된 “글로벌 플랫폼”의 출현

- 플랫폼 전략은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며, 산업의 중심을 **제품 판매→서비스 제공**으로 이동

- 일단 플랫폼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형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수 있어 **산업간 경계가 약화\***

\* 온라인 도서 판매점인 아마존이 온라인 소매 대기업으로 변모한 것이나, 통신업에 속하는 카카오가 운송업의 영역인 카카오 택시 등 O2O 서비스를 제공

- 사이버물리시스템의 구현으로, 플랫폼에서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개인 및 기업들이 활용하는 자동차, 기계설비, 부동산 등의 자본재까지 결합,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활용 능력이 향상될 전망

- 현재 제품을 보유하고 판매하는 소매업자들이 플랫폼 업체의 지배력하에 있는 것 같이, 점차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 **플랫폼 산업이 미치는 영향력이 가속화될**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비 필요

□ (패키지형 수출확대) 단순 상품 수출의 전통적 모델에서 탈피하여 상품, 서비스 등이 혼합된 패키지형 고부가가치 수출 모델로 체질 개선

- 과거 기업들은 제품 생산과 판매에서 주된 가치를 창출하였지만, 점차 **서비스 기능(연구개발, 디자인, 마케팅, 애프터서비스) 융합을 통해 많은 가치를 창출\***

- \* 상품·서비스 융합은 제조업 가치사슬에 서비스의 역할이 새로 편입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의 제조업에 ICT 기반 서비스를 결합하는 비즈니스를 추진

□ (현지화 전략 재정립) 트럼프 대통령 공약의 주요 특징이 미국산 제품구입과 미국인 고용이므로, 대미투자시에는 이를 고려한 현지화\*전략을 재정립 할 필요

- \* 현지화는 투자진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경영, 생산, 판매, 홍보 등 다양한 기업 활동에 현지현황을 반영하는 활동을 지칭
- 기존 현지화 전략은 제조업의 경우 비용절감을 위한 생산기지 확보차원에서 신흥국 위주 해외진출이었으나, 점차 내수시장 진출 목적으로 전환되는 추세
-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연구개발, 판매, 광고 등에서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중시해야 하고, 지역내 네트워크 강화도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
-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하여 미국인을 고용하려는 정책을 추진, 대미수출 및 인접국 수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류를 면밀히 점검·추진

## 참고문헌

- 고희채 외(2014), “미국 하원의 통상정책 결정요인과 시사점”, 연구자료 14-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윤경 · 유학식(2016), “미국 차기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망과 시사점”, 에너지포커스 2016년 겨울호(제13권 제4호, 통권62호), 에너지경제연구원.
- 정준우 외(2017), “2017 글로벌 정치지형의 변화와 경제”, 「국제경제리뷰(신년특집)」, 한국은행.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6.10).
- Joseph Kile(2014), “Testimony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Highway Project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 Mark Zandi et al.(2016),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Mr. Trump’s Economic Policies”, Moody’s.
- OECD(2015), “Health at glance”.
- OECD(2016),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16 Issue 2, OECD Publishing, Paris.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6),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USITC(2016),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Likely Impact on the U.S. Economy and on Specific Industry Sectors”, May 2016, Publication Number: TPA-105-001.
- Whalen J. Charles and Felix Reiching(2015), “The Fiscal Multiplier and Economic Policy Analysis in the United States”, Working Paper Series, CRS.

Wibur Ross and Peter Navaro(2016), “Trump Versus Clinton On  
Infrasture”, Oct. 27, 2016.

William Clinton et al(2017), “Implication of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for Trade Policy”, 2<sup>nd</sup> Edition, January 2017, White &Case.

자료

CEIC.



작성자

◆ 글로벌전략지원단      고희채



Global Strategy Report 17-001

트럼프노믹스  
주요정책 특징 및 대응방안

발행인 | 김재홍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7년 2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문의처 | 글로벌전략지원단  
(02-3460-7724)

ISBN : 978-11-6097-110-1 (93320)

Copyright © 2017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G l o b a l S t r a t e g y R e p o r t